

중국, 자금난 · 고금리 해결 “이견”

원자바오 총리, 실물경제 회생 위해 ... 리커창 부총리는 물가안정 주장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1월6-7일 베이징(Beijing)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등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열렸다.

원자바오 총리는 회의에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해 서민주택 건설 등의 주요 프로젝트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금융기구 개혁 ▲지방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 정책, 화폐 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 개방 확대 등을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도시화 · 신성장산업 · 광산자원 및 환경 관련 세미나>에서 “국내외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과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비롯해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단 제조업과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감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9>